

##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3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주요 반부패 정책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주요 내용 (총 5건)

- ① 국민권익위, 주요 공공기관 감사관회의 개최(23.9.12.)
- ② 2024년 예산안 1,116억 원 편성 "신고자 보상·포상금 대폭 확대"(23.9.14.)
- ③ 고위공직자 청렴 의식 강화한다(23.9.14.)
- ④ 한국 '반부패 정책', 개발도상국에 전수(23.9.4.)
- ⑤ 기발한 아이디어로 대한민국 '청렴' 선도(23.9.18.)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렴정책)

■ 문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044-200-7612)

## 국민권익위, 주요 공공기관 감사관회의 개최

- 전관특혜, 재정낭비, 채용비리 등 카르텔 부패 해소 위한 3대 중점 과제 논의 -  
(’23. 9. 12. 국민권익위)



전관특혜·재정낭비·채용비리 등 카르텔 부패를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요 공공기관 감사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및 주요 공직유관단체 감사관을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카르텔 부패 해소를 위한 3대 중점 과제와 올해 하반기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카르텔 부패 해소를 위한 3대 중점 과제는 ▲공공기관 퇴직자의 전관특혜 등 공공·민간 접점 부패 ▲이권 카르텔에 의한 공공재정 낭비·누수 ▲청년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공공주택 부실시공 사태로 불거진 퇴직공직자 전관특혜 의혹 등 카르텔 부패 해소를 위해 지난 달 10일 공공주택 사업 부패·공익침해 신고 접수처를 신설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전관 특혜 및 부실시공 등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국민권익위는 발굴한 문제점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업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이권 카르텔에 의해 나랏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수급 취약분야에 대한 실태조사와 집중신고기간 운영, 각급 기관의 부정수급 제재처분 이행 조치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비리에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비리 현안과 신고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조치 ▲전체 공직유관단체의 채용실태와 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기준 등에 대한 실태점검 ▲공정채용 전문 교육·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공정채용 정책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감사관 회의에서 논의된 카르텔 부패는 국민안전과 경제성장, 공정사회 등 국민생활이나 정부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카르텔 부패 해소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감사관 회의가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카르텔 부패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급 공공기관에서도 적극 힘을 모아달라”라고 당부했다.

## **내년 예산안 1,116억 원 편성 "신고자 보상·포상금 대폭 확대"**

-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확대 추진 -

(‘23. 9. 14. 국민권익위)

내년에는 부패행위나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에 모든 지방의회를 포함한다.

또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심판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행정심판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집단민원을 중점 관리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예산보다 166억여 원 늘린 1,116억 원을 편성해 국민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에 집중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먼저 국민권익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권익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핵심사업을 추진한다.

### **< 국민편의 중심 행정심판 체계 개편 >**

현재는 개별법률에 따라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국민이 행정심판 절차를 이용할 때 사안별로 행정심판 접수기관과 절차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66개의 특별행정심판위원회 법체계 및 운영현황 등을 검토·분석한 후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심판통합기획단'을 설치했으며 내년에는 이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또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심판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 시스템을 일원화한다.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이 온라인으로 한 곳에 접속해 보다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이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심판통합추진: ('23) 0원 → ('24 안) 72백만 원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23) 370백만 원 → ('24 안) 16,885백만 원

### < 국민 고충민원 해소 노력 강화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집단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과 이해관계자의 입장 청취 및 조율을 위한 과정이 필요한 만큼 협의·조정회의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또 지역사회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도입하기 위한 컨설팅 예산 등을 확대 편성했다.

\* 집단민원 중점관리: ('23) 22백만 원 → ('24 안) 42백만 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지원: ('23) 100백만 원 → ('24 안) 130백만 원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공정개혁 성과 창출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청렴·공정 문화 정착과 부패·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강화에 중점을 뒀다.

### < 청렴역량 수준 제고로 청렴·공정 문화 저변 확대 >

사회 전반의 청렴·공정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민간부문 및 대국민 청렴역량 수준을 높인다.

우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을 2023년도 92개(광역의회 17개, 시의회 75개)에서 243개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 부패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올해 배포됨에 따라 내년부터 공기업 등이 이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등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부문과 일반국민·학생을 위한 청렴교육도 강화한다. 더 다양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청렴라이브' 예산을 확대한다.

또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방문교육 대상 학교 수를 45개교에서 85개교로 늘리는 등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 종합청렴도 평가: ('23) 2,302백만 원 → ('24 안) 2,738백만 원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23) 128백만 원 → ('24 안) 178백만 원

청렴라이브: ('23) 150백만 원 → ('24 안) 250백만 원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23) 338백만 원 → ('24 안) 384백만 원

< 부패행위·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활성화, 신고자 보상·포상금 확대 >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부패와 이권 카르텔에 의한 공공재정 낭비·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이 필수적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 교육 등을 강화하고 부패행위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등으로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나 비용 절감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부패신고자 보상금: ('23) 2,697백만 원 → ('24 안) 2,864백만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포상금: ('23) 563백만 원 → ('24 안) 749백만 원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더욱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2024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고위공직자 청렴 의식 강화한다

-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9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 특강 -

(’23. 9. 14. 국민권익위)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9월 14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국가발전과 청렴 지수의 관계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자세’에 대해 강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7동 대회의실에서 53개 공공기관 고위공직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리더십 고위직 교육을 실시했다.

‘청렴리더십 고위직 교육과정’은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직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높은 수준의 청렴과 윤리적 리더십을 함양하고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국가발전과 청렴 지수의 관계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자세’를 주제로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고 청렴한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강연했다.

이재오 이사장은 특강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는 반부패와 청렴으로, 고위공직자일수록 반부패와 청렴을 실천하고 생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로부터 우리나라 공직자들은 청렴을 자기 목숨처럼 지키는 삶을 살았다.”라며,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자 리더 국가가 되려면 공직자의 청렴문화가 더 깊고 폭넓게 자리 잡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재오 이사장은 2009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제2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올해 7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국민권익위는 2012년부터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포함), 지방의회, 공직유관단체 등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리더십 고위직 교육과정’을 운영해 올바른 공직 윤리관 확립과 청렴 인식 확산을 지원해왔다.

국민권익위 김세신 청렴연수원장은 “고위공직자 한 명 한 명의 청렴 인식과 행동은 곧 사회의 공정과 정부의 신뢰 수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의 청렴리더십 고위직 교육은 고위공직자의 청렴 의식과 가치를 끊임없이 내재화시키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한 업무 관행과 문화가 자리 잡고 정부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국 '반부패 정책' 개발도상국에 전수

- 청렴도평가 등 공유해 인도, 가나 등 8개국에 청렴도 개선 지원 -

(’23. 9. 4.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을 인도, 필리핀, 가나, 탄자니아 등 8개국 공무원들에게 전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9월 4일부터 6일간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과정”을 운영했다.

올해 연수에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캄보디아, 가나, 우간다, 탄자니아 등 인태 지역 및 아프리카 8개국 반부패 관계기관 공무원 총 16명이 참여했다.

연수 참가자는 가나 인권행정위원회 조셉 위탈 위원장과 스티븐 아잔 툴로우 국장, 우간다 윤리청렴청 니콜라스 아볼라 국장 등 고위급 인사를 비롯해 과장급과 실무직원까지 다양한 직급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연수과정에서는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제도 등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제도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법령의 핵심 내용을 교육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유엔(UN) 반부패 협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등 반부패 협약 이행 노력을 소개하고, 연수에 참여한 국가들이 자국의 최근 반부패 활동을 상호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 공무원들의 반부패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수과정을 운영해 왔다.

2012년 유엔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한 청렴도평가를 비롯해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제도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이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으면서 국민권익위의 연수과정에 대한 교육수요도 꾸준히 증가해 그동안 71개국 338명이 연수에 참여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수요 증가에 맞춰 영어로 진행되는 연수과정 외에 2020년에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국가를 위한 러시아어 과정, 2023년에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불어 과정을 신설한 데 이어, 2024년에는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스페인어 연수 과정도 개설할 계획이다.

김세신 청렴연수원장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반부패 기술지원은 유엔 반부패협약에 규정된 의무인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국가청렴도(CPI)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경험이 개발도상국의 반부패 역량 강화와 청렴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기발한 아이디어로 대한민국 '청렴' 선도

- 2023년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

('23. 9. 18.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다음 달 31일까지 MZ세대 등 청년들을 대상으로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한다.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는 국민권익위가 미래세대 청년들의 국내·외 반부패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개설한 청렴교육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청렴 가치관을 확립하고 예비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교육 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대학(원)생 및 졸업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직원 약 80명

이번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국민권익위 누리집과 청렴연수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희망 신청자는 붙임의 신청서 양식을 [cys3034@korea.kr](mailto:cys3034@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는 2023년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 서울시 마포구 소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반부패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특강 ▲분주한 일상 속 기분 좋은 에너지로 채워 넣을 수 있는 청렴 북 콘서트 ▲채용담당자가 바라본 기업에서 요구하는 경영 등 MZ세대의 공감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특히, 2030 청년 세대들이 일상 속에서 겪고 있는 부패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토론·발표하고, 우수한 3개 팀에게 국민권익위원장 명의의 상장과 부상이 수여된다. 또 교육 신청자 전원에게 도서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국민권익위 김세신 청렴연수원장은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는 어렵고 딱딱할 수 있는 국내외 청렴·반부패 제도와 정책을 청년들의 수요와 눈높이에 맞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흥미롭게 만든 교육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발한 아이디어로 대한민국의 향후 청렴 트렌드를 선도할 청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덧붙였다.